



김금수

옥성서비스상사 대표

축산인은 축산인만을 위한 정책을 원하지 않는다

온 나라가 5공비리, 광주항쟁, 언론인 대량학살과 언론통폐합 문제에 대한 국회차원의 특별위원회 개최에 대한 TV 생중계로 야단법석이다.

한편에서 보면 과거 어두운 그림자를 일면 엿볼 수 있는 기회로 타당한 점도 없지 않으나 우리 축산인의 입장에 얼마나 도움이 될 지 의문이다.

물론 차원이 틀린 이야기지만...

정치 이야기와 생업차원의 이야기가 동등하게 이루어질 수는 없겠지만... 정치는 국민의 생업을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과거에 집착해 미래지향적인 정책 제시 방향이 미흡하고 숨막히는 축산인의 심정을 이해한다는 국회의원의 발언을 희망보다는 절망적 사항이 앞서는 느낌이다.

과거의 잘잘못에 대해서 과해치고 미래의 희망을 제시하는 정치판이 되어야 축산인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생기가 되살아 날텐데 하는 축산인의 바램을 아는지 모르는지...

축산정책에 대해서도 마찬가지가 아닌가 한다. 과거의 잘잘못에 대해서 축산인은 정책만 탓한다고 되는 것은 아닐 것이다.

[수입소 및 수입 쇠고기 과다 도입→국내 소값 폭락→수입 쇠고기 수입 중단→국내 소 사육기반 붕괴→쇠고기 수입 재개→국내 소값 폭등→수입 쇠고기 대량 수입 우려?→국내 소 사육농가 피해 재판 우려?→수입 쇠고기 수입 중단?]

위와 같은 현상이 되풀이 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으며 사료 수입 자유화에 대하여도 검토가 진행되고 있는 모양이지만.

[축산물은 수입을 개방하면서 축산물 생산 원자재인 사료 원료의 수입을 제한하는 행위에 대해서 정부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이 또한 정책의 앞뒤가 모순되는 즉, 순서가 안맞는 이야기가 아닌가 한다.

누구를 위한 축산물 수입 개방 정책인가?

누구를 위한 축산물 생산 원자재인 사료원료의 수입을 제한하는 정책을 지속하고 있는지?

축산인은 축산인만을 위한 정책을 원하지 않을 것이다. 축산인은 소비자인 국민과 축산인을 위한 정책을 원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정책이 미흡하고 속도가 느리기 때문에 축산인이 짜증을 내고 있는 현실이 아닌지? [87]